



2017. 4.



19대
대선 후보에게 드리는
**사회복지계의
제언**

2017. 4.

제언 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건설은 국가가 재정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민간과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관 협치를 통한 사회복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복지 확장과 더불어
민간의 동반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새롭게 수립하시는 데

민간복지계의 바람을 들어주시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복지계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

‘복지한국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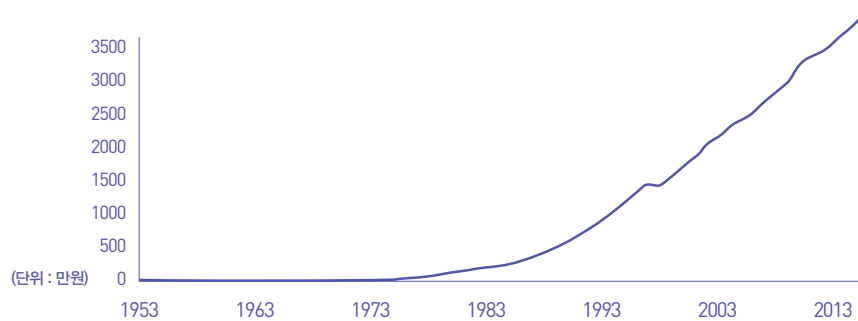
한강의 기적을 넘어 ‘복지한국의 기적’을 꿈꿉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그 어느 나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공사례는 개발도상국의 ‘성공학 교과서’가 되어
실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은 물론 사회개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빠르고 눈부신 발전을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미국도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면서,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강의 기적을 넘어,
이제 우리는 ‘복지한국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추이(1953~2016)
출처: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그 중심에 민간복지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고아가 생겨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밥 한 끼 해결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복지는 꿈도 꾸지 못하던 그 시절,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과
민간의 힘으로 복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원조를 받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복지모델**을 전수해 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니세프(UNICEF)로부터 도움 받는 나라에서
1994년 도움 주는 나라가 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엔젤스헤이븐 등을
비롯한 민간복지부문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유니세프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도약

유니세프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대한민국 정부와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모금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 80년대의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건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3년 유니세프 대표부가 철수하였고, 그 대신 1994년 1월 ‘선진국형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설립되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 약 40억원이 모금되었고, 2013년 이후부터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모금으로 세계 4위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공공-민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국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국민의 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도 어딘가에는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공과 민간 어느 한 쪽이 우위에 있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서로 협력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하면
미래지향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모두를 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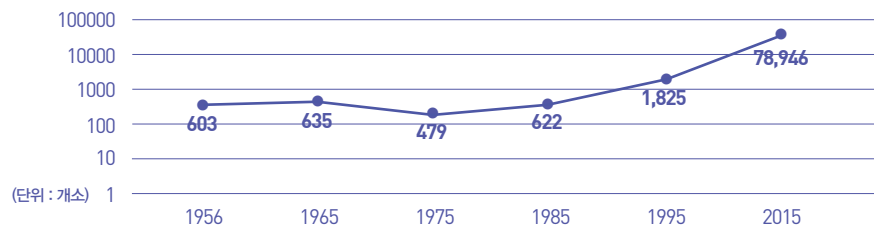
이○○ 씨는 사고로 인해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고 있는 독거노인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는 노후 주택에 사는 이○○ 씨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군부대, 수도설치업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지원했습니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이○○ 씨는 민과 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 환경이 변하면서 곧 사람의 변화가 찾아 온 것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구한 것은 결코 ‘한 사람’ 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은 웃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가 꿈꾸는 희망이었습니다.

민간 복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간복지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고,
1980년대 이후 관련 입법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총 459개소 중
민간위탁 331개소, 민간직영 97개소, 지자체직영 31개소로
민간의 비중이 공공부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민간부문은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의 욕구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복지는 ‘**복지한국의 기적**’을 이뤄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국사회복지 시설 수 추이(1956~2015)

출처 : 2015년 주요업무, 보건복지부, 201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부자료

- 1880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법제화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합니다.
- 1990년대 사회복지시설이 분야별로 체계화되었고 지역사회 중심의 이용시설이 증가하였습니다.
- 2000년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시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돌봄 사회화에 따른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규제’보다는 ‘육성·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수요 증가로
복지정책과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가 사회복지에 개입하면서
민간부문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과 제도들이
오히려 민간복지 기관들을 규제하고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복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민간부문에 대한 **‘육성·지원’**이 필요합니다.

혁신적 ‘복지생태계’ 조성을 통해 복지국가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민간복지부문의 발전은 사회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혁신을 통해 **복지생태계**가 조성되면
경제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보고(寶庫)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일자리는 지난 10여 년 간
다른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는 국민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는
사회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혁신적 **복지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와 ‘경제’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와 경제의 융합적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회부총리’는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부총리와 협업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가능한 상생구조가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영유아 보육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누락’**과 **‘중복’** 혹은 **‘편중’**현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함으로써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문제 등
각종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리더십체계가
구축 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민간부문은 복지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통합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를 제언 합니다.

첫째,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육성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신바람나는 복지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기업과 지역사회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온 국민이 함께 하는 나눔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복지 부문은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공과 민간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기구가 긴밀히 협력하면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담당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민간차원에서
실천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민간대표협의체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으면
민관 협치가 원활해져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민관 협치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효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민관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공부문의 인프라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전달체계를 활용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모든 시·군·구에
의무설치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다음과 같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 기부, 후원, 인적 자원, 공동모금 등 지역의 민간자원 활용으로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주민참여가 활성화됩니다.
- ‘공동모금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일본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심적 역할

- 일본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민간복지전달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市町村社会福祉協議会)는 지역복지계획에 따른 ‘주민활동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습니다.
-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는 자립·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 ‘생활근거자 자립지원제도’, ‘개호예방·생활지원종합사업’을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본 민간부문의 양대 축인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는 중앙, 도도부현(都道府県), 시정촌(市町村)
단위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는 지역복지 추진을 위해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 공동모금회는 모금계획 및 배분 시 사전에 사회복지협의회의 검토의견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중앙공동모금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시정촌 경우에는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장을
공동모금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지역모금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가 모금한 모금액을 중앙공동모금회로 보내면, 전체 모금액 중 70% 정도를 다시
공동모금회에서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로 보냅니다. 그 모금액으로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완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가 2008년 27만 명에서 2016년 86만 명으로
8년 동안 약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예비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실습시간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혜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
도덕성을 갖추고 책임감이 있어야만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와 **‘보수교육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미국

사회복지사 인력관리 시스템은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엄격한 요건으로 자격을 수여하고,
세분화된 전문자격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직무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양한 학습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개방하고 있으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육성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규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매우 높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복지규제는 사회복지현장을 경직시켜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어렵게 합니다.

사회복지 규제개혁은 백지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사회복지규제혁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에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규제개혁은 경제활동 부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참여정부 규제개혁**
“규제개혁은 무조건적 철폐가 아니라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질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MB정부 규제개혁**
“전봇대 때문에 대형트럭이 이동하지 못하여 물류에 차질이 생깁니다.”
-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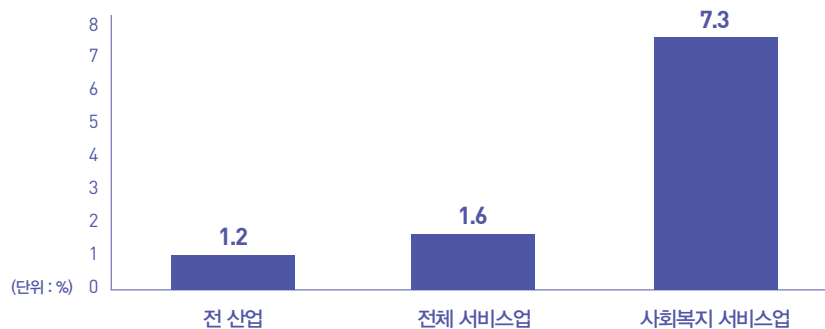
사회복지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장기적인 경제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과 수출산업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로 ‘고용절벽’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사회복지부문의 취업증감률이 전 산업 대비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시설별 종사자의 수를 정하고 있어 그 이상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종사자 수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 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력기준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2013~2023), 출처: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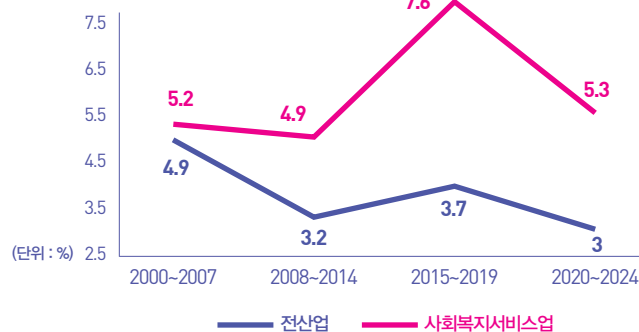
사회복지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로
부가가치와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지산업정책국**’을 신설하여,
복지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세부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증가율

출처: 조저출산·고령사회와 산업구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산업화지원조직 현황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이 있으며, 산하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 국민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

안전산업육성지원단(국토교통부, 미래
창조과학부, 노동고용부 등 참여)을 만
들어서 안전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신바람나는 복지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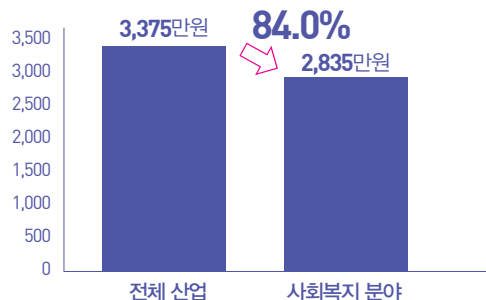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가 미래사회의 유망분야라고 하지만
100만 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실제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68%가 이직 경험이 있으며, 이직 횟수는 평균 3.2회 입니다.

심지어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는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아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84%** 정도이며,
공무원 평균의 76%, 교사 평균의 73%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산업 평균 대비 사회복지 분야 평균임금(2016)

출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7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사 인권현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근속기간은 평균 6년이고,
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은 평균 4년입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근속기간을 100으로 기준하여
비교하면, 사회복지사 58, 유치원 교사 65,
간호사 97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법정근로시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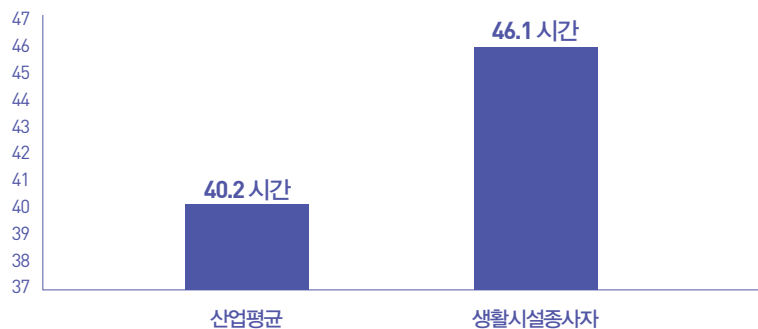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기저하 및 소진,
나아가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합니다.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근무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생활시설 종사자는 주당 46시간을 근무하여
법정 근로시간보다 평균 6시간을 초과 근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사회복지현장의 서비스 질이 확보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신바람이 불어 올 것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신명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 근로시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산업평균근로시간 대비 생활시설종사자 근무시간

출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문제가 이슈화되었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은 물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폭언(48.6%), 폭행(9.7%), 성희롱(10.8%)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피해 사례 인터뷰

“저는 한번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갑자기 제 목을 졸라서 정말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가정방문 시 빵을 때리거나 먹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세요 한번은 빗자루로 맞은 적도 있구요”

“보호자가 클라이언트 강제퇴소 과정에 불만을 품고 ‘밤길 조심해라, 뒤뜰에 묻어주겠다’ 등의 협박을 한 적도 있어요”

* 출처 : 사회복지 종사자 위험 실태분석 및 위험관리 방안연구, 부산복지개발원, 2016



기업과 지역사회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기업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지원조직’을 육성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비용지출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하나의 **‘사회적 경제’** 수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을 연계하는
‘민간지원조직’이 필요합니다.

‘민간지원조직’은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장기적·계획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BITC를 통한 지역경제개발 사례

영국의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는 기업들의 효과적인 사회 환원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전문 조직입니다.

BITC는 2001년부터 기업의 자원이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파악하여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ITC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지역을 연결해줌으로써 기업과 지역이 서로에게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연자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탈퇴 등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통공간을 확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공헌플랫폼**’은 지역사회와 기업을 연계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복지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현장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과 복지 현장을 연결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의 사회적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이윤추구를 기본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것은無理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없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일과성으로 그치기 쉽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부금 액수보다는
기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공헌(CSR) 우수기업에 대한
정례적인 포상과 세제 지원 등을 한다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 영국 세금감면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

낙후된 지역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를 해당연도에 세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호주 기업이 사회공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5000달러 이상 기부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유산 기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 미국, 독일 CSR 우수기업 시상

미국과 독일은 CSR 모범기업에게 CSR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방글라데시 CSR 법률로 의무화

프랑스는 ‘신경제규제법’을 제정하여 CSR을 의무화 하였고, 방글라데시는 시행령을 제정하여 정부가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1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5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나눔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부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바람입니다.
기부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는 기부금 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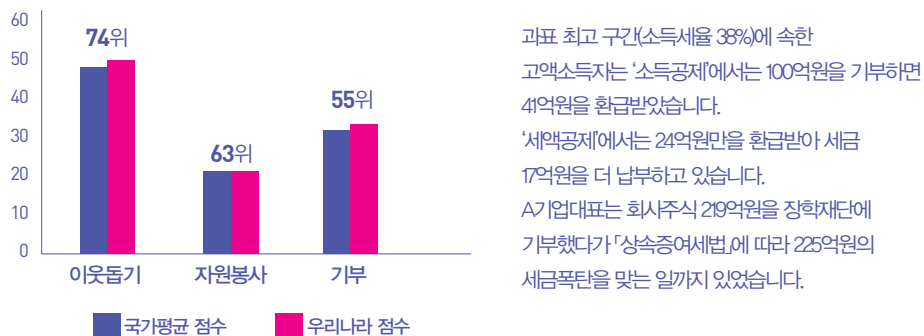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액기부자의 세금부담 증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홀트아동복지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은 기부금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을 개정하여 고액기부자의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변칙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 부작용이 큼니다.

따라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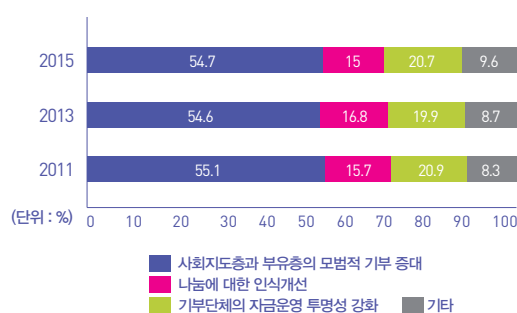
나눔별 국가평균 대비 우리나라 비교
나눔실태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홀몸노인 수십억대 재산을 기부하고 세상 떠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아름다운 기부문화**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노후생활을 위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기부증대가 관건입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1843년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여
170년 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또한 ‘기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기부연금법’을 제정하여 고액·사전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미국

총규모 150억 달러, 연금수혜자 평균연령 78세,
14년간 연금수령을 받고 있습니다.

● 캐나다

60세부터 수급자격이 발생되고, 기부자 본인, 배우
자,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 합니다. 수령한 연금은 부
분 또는 전부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나눔 활성화를 위한 방안

출처: 나눔실태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계획기부’를 통해 나눔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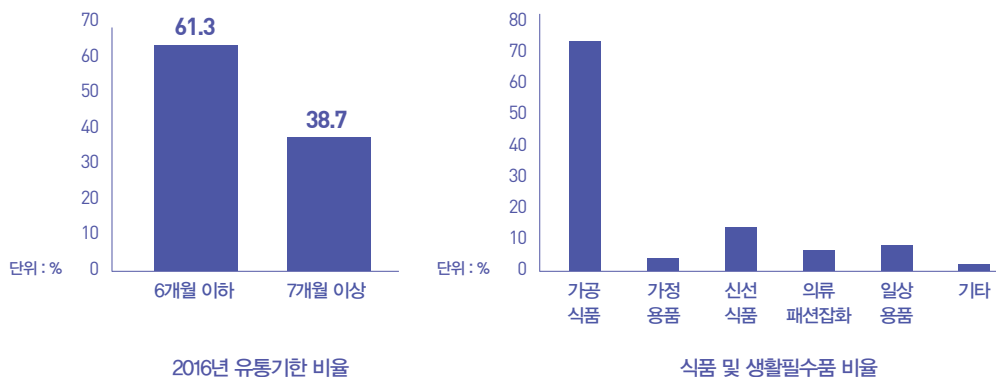
우리사회는 연말연시 ‘반짝기부’ 이후 나눔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나눔은 일과성이 아니라 계획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푸드뱅크는 사회취약계층의 먹거리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유통기간**과 **품목 쏠림현상**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품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기부를 계획하고 생산한다면
이런 문제점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계획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기부계획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계획기부’ 사례

- CJ푸드빌 뚜레쥬르는 빵 2개가 팔릴 때마다 단팻빵 1개를 사회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착한빵’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 대전 지역기업인 “성심당”은 팔고 남은 빵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다가 생산단계부터 기부량을 고려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신발업체 탐스(TOMS)는 신발 한 켤레를 팔 때마다 빈민국 아이들에게 똑 같은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내부자료, 2017

문의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배 도 02-2077-3970

책임연구원 장영신 02-2077-3971

